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국민의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를 키운다.
- 부정부패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목 차

■ 국민의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를 키운다
: 부정부패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Executive Summary	i
1. 부정부패 방지의 중요성	1
2. 부정부패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2
3. 시사점	11
【HRI 경제 통계】	12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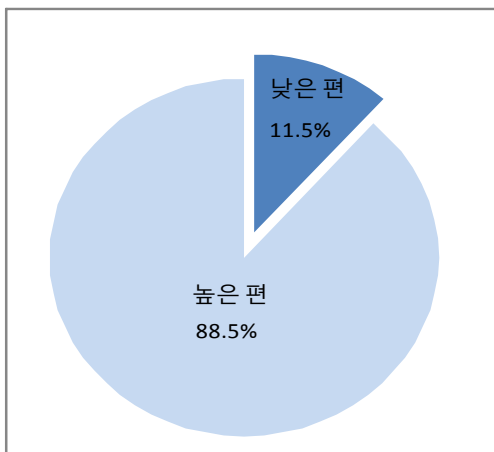
1. 부정부패 방지의 필요성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부정부패 수준을 OECD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면, GDP를 0.65%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결국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부정부패 방지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 토대 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정부패 의식 수준과 특징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부정부패 방지 방안 수립의 방향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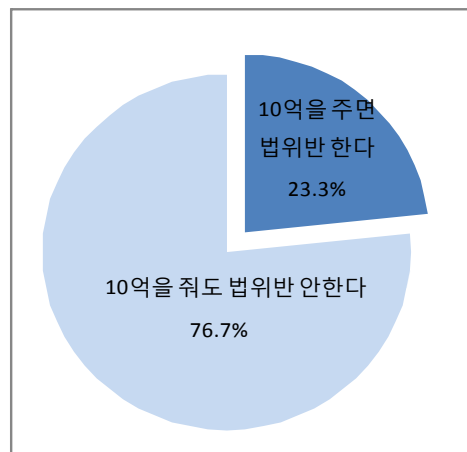
2. 부정부패 관련 인식 조사 결과

(부정부패 인식) 첫째,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이 88.5%이다. 특히, 20대의 경우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부정부패 수준에 대한 전망도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 45.0%,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 29.2% 등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 4명 중 1명은 10억을 주면 범위반도 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현금 10억이 큰 돈인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한 댓가가 제공된다면 범위반도 하겠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에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지하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수준>



<10억을 주면 법 위반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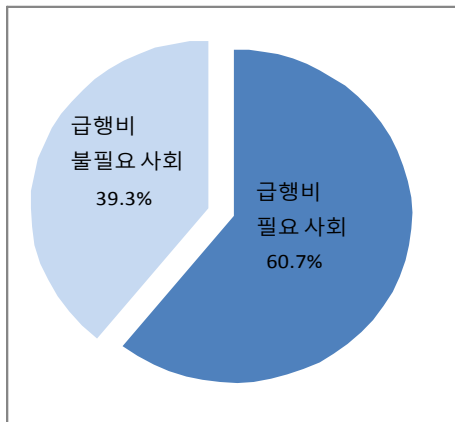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7월 조사.

(부정부패에 대한 기준 및 의식 수준) 첫째, 국민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를 찾아주고 음료수를 얻어 먹은 경찰에 대해 음료수 정도는 괜찮다고 응답한 사람이 95.8%로 대부분이다. 핀란드의 경우 같은 상황에서 음료수를 먹은 경찰이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지인에게 저금리도 대출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39.5%만이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독일의 경우 대통령이 비슷한 사안으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자진 사퇴하였다. **둘째,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편법은 필요악(65.8%)이며, 업무처리시 급행비가 필요(60.7%)하다고** 생각한다. 깨진유리창이론에 따르면, 사소한 편법이라도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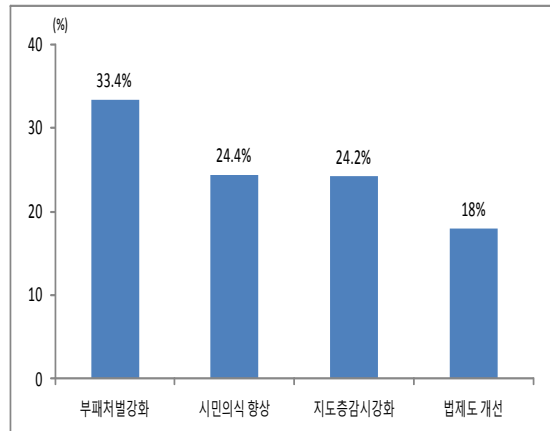
치하면 좀 더 큰 부정부패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런 단일한 인식이 부정부패 민연의 한 이유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과반수 정도(47.8%)는 친구나 친척의 비위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의한 비도덕적 행위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10명 중 4명 이상(42.6%)이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면 오히려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규정 준수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정 준수를 융통성이 없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40%를 넘는다는 사실 역시 부정부패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부패 방지 방안) **첫째,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 국민들은 부패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가장 선호(33.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시민의식 향상'이 24.4%, '사회지도층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가 24.2%,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이 18.0%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정부패에 단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 모두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부패에 엄격하려고 노력한다고 인식하는 사람(41.5%)들도 많은 편이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엄격하다는 사람(20.7%) 등을 포함하여 이들을 부정부패 방지 의식 개선을 위한 선도자로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업무 처리 시 급행비 필요>



<부정부패 방지 방안>



3. 시사점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들의 합의 과정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상황이 다른 선진국 수준의 엄격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만의 부정부패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가 역시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단호한 처벌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사회지도층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들이 스스로 단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1. 부정부패 방지의 필요성

-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한 방안으로 부정부패 방지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한 나라의 부정부패 상황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은 편임
- 한국의 경우도 부정부패 수준이 매우 높음으로 인해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최근 자주 대두됨
- 특히,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¹⁾는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있음
- OECD 국가들의 평균 부패지수는 7.0점인데 반해 한국의 부패지수는 4.7점으로 OECD 평균보다 2.3점 높음
- 한국은 각종 법·제도 개선 등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국가 청렴도를 제고시켜 OECD국가 평균에 이를 경우 연평균 1인당 명목 GDP는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기준으로 연평균 0.65%p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정부패 인식 수준과 특징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부정부패 방지 방안의 방향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부패 방지에 따른 한국의 경제성장 상승 효과 >

구분	평균 부패지수(p)		1인당 명목 GDP 상승효과	명목 GDP 상승효과
	OECD	한국		
'95~'10년 평균	7.0	4.7	138.5 달러	0.6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2.5), '부패와 경제성장'.

1) 부패지수는 세계은행, 프리덤하우스, IMD, 세계경제포럼 등 각 기관들이 기업인과 전문가들에게 실시한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출. 10점 만점으로 0점이 가장 부패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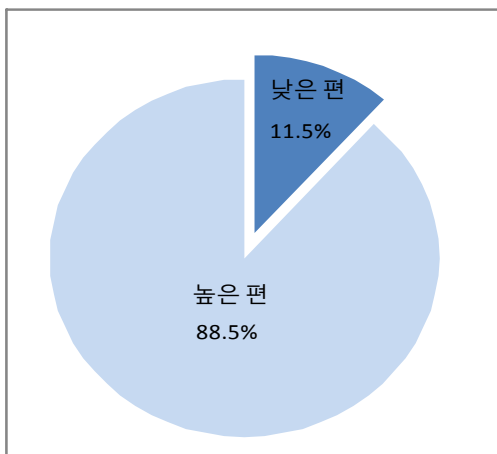
2. 부정부패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2)

(1)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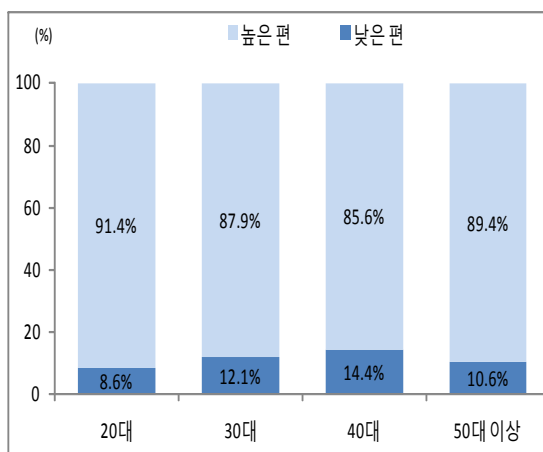
○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수준이 높다는 의견 88.5%

- 국민 10명 중 9명 정도는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귀하는 우리 사회 부정부패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8.5%의 사람들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함
 - 부정부패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10% 정도에 불과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수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 (연령별 비교) 특히, 20대의 경우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 20대는 91.4%, 30대는 87.9%, 40대는 85.6%, 50대 이상은 89.4%가 우리나라 부정부패 수준을 높다고 인식함

<우리사회에 대한 부정부패 인식>



<부정부패 인식(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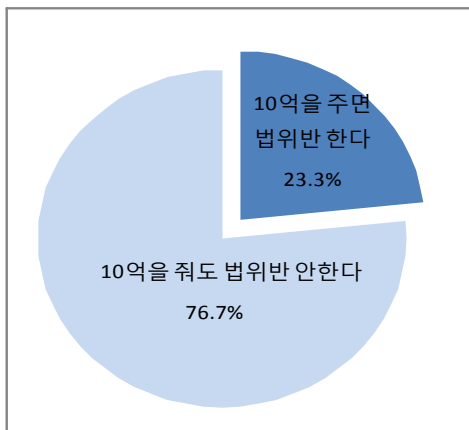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10월 조사.

2) ‘부정부패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국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유선 전화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의 최대 오차 범위는 95%신뢰수준에서 ±3.4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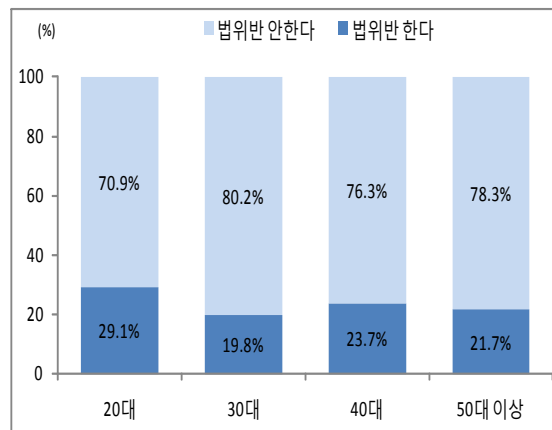
○ 국민 4명 중 1명은 10억을 주면 범위반도 하겠다

- 국민 4명 중 1명은 충분한 댓가가 주어지면 법 위반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누군가 나에게 현금 10억을 주면 어느 정도의 법 위반 행위는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에 23.3%이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함
 - 현금 10억이 큰 돈인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한 댓가만 제공된다면 법 위반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법을 위반하는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전반적인 인식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음
- (연령별 비교) 특히, 20대의 경우 댓가에 따른 법 위반 행위 가능자가 약 30% 정도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냄
 - 20대의 경우 29.1%로 댓가에 따른 법 위반 가능자가 가장 많음
 - 반면, 30대는 19.8%로 가장 적고, 40대 23.7%, 50대 이상은 21.7%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되어야 할 20대가 부정부패에 대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 법 위반에 대해 관대하다는 사실은 향후 부정부패 방지 노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음

<10억을 주면 범위반 한다>



<10억을 주면 범위반 한다(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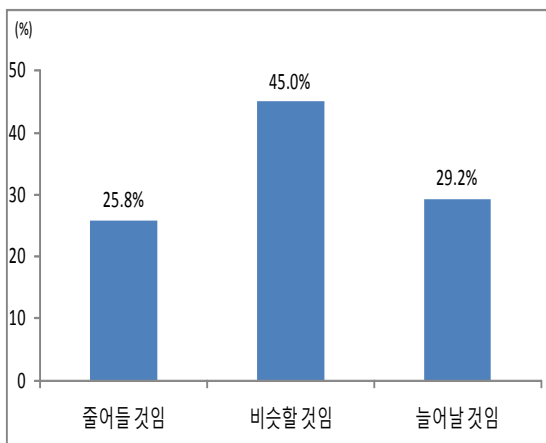
○ 향후 부정부패 수준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

- 우리나라 사람들은 향후 부정부패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귀하는 향후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패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응답 25.8%,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라는 응답 45.0%, ‘부패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응답 29.2%임
 -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높다는 사실은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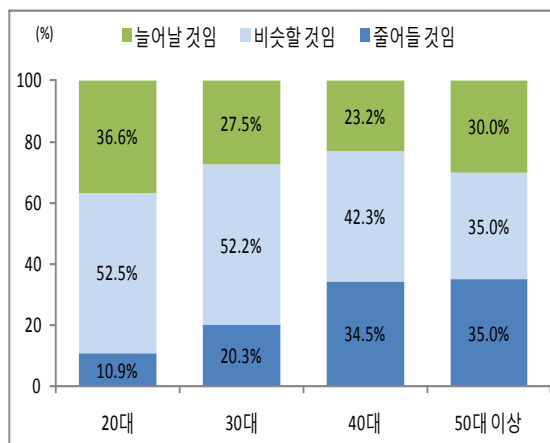
- 특히, 현재의 부정부패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전망을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과반수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 역시 부정적 전망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음

- **(연령별 비교)** 연령별로는 2030세대가 좀 더 부정적인 반면, 4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임
 - 20대와 30대는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각각 36.6%와 27.5%로,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 10.9%와 20.3%에 비해 많음
 -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은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각각 23.2%와 30.0%로,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 34.5%와 35.0%에 비해 적음

<미래 부정부패 수준 전망>



<미래 부정부패 수준 전망(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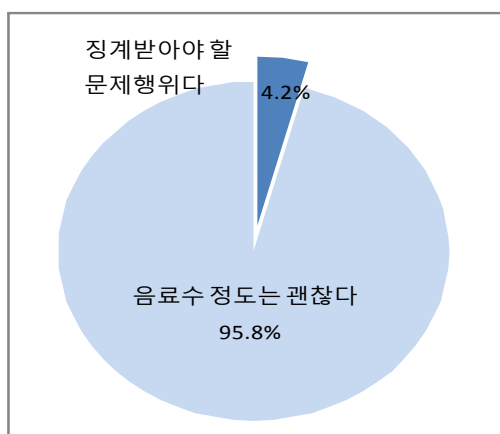


(2) 부정부패에 관대한 국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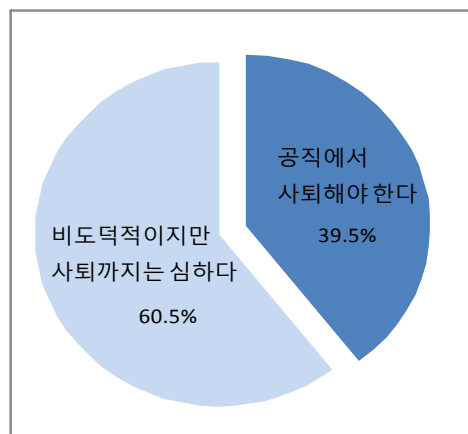
○ 국민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

- 청렴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은 공직자들의 사소한 부패도 용서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음
 - ‘귀하는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를 찾아준 경찰이 주인에게 음료수를 얻어먹은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5.8%가 ‘음료수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함
 - 그러나, 핀란드에서는 자전거를 찾아 준 감사 표시로 음료수를 얻어먹은 경찰이 문제가 되어 약 2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음
- 또한, 지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공직자의 공직 사퇴에 대한 의견에도 사퇴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훨씬 많음³⁾
 - ‘귀하는 공직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지인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비도덕적이지만 사퇴까지는 심하다’라는 응답이 60.5%로 나타남
 - 그러나, 실제 독일에서는 볼프 대통령이 특혜성 사채와 저금리 은행 용자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하자 사퇴를 한 사례가 있음

<음료수를 받은 경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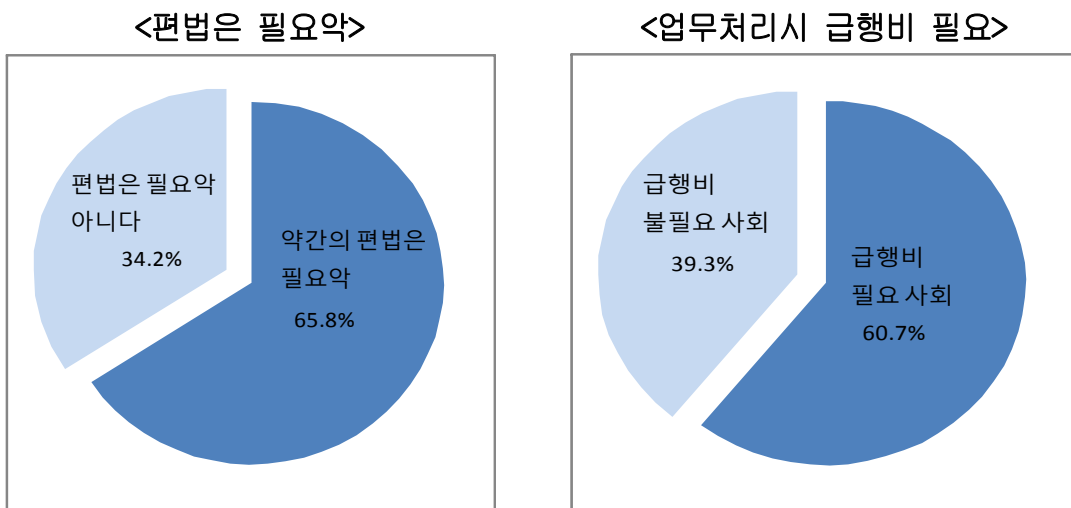
<지인에게 저금리 대출받은 공직자>



3) 2012년 독일의 볼프 대통령은 니더작센 주총리 시절 자신의 주택구입을 위한 특혜성 사채와 저금리 은행 용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압력을 행사 했고, 이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공직에서 사퇴함.

○ 우리사회는 업무처리시 급행비가 필요하며, 편법은 필요악이다

- 국민 3명 중 2명 정도는 약간의 편법이 사회 생활을 하는데 필요악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약간의 편법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65.8%로, ‘아니다’라는 응답 34.2%보다 상당히 높음
 -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⁴⁾에 따르면, 사소한 편법이라도 방치하면 큰 부정부패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소위 급행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표시함
 - ‘우리나라는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급행비가 필요한 사회’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60.7%로 나타남
 - 국민들은 사소한 편법에 대해 인정할 수밖에 없을뿐 아니라, 실제 행위에 있어서도 급행비와 같은 부정부패 요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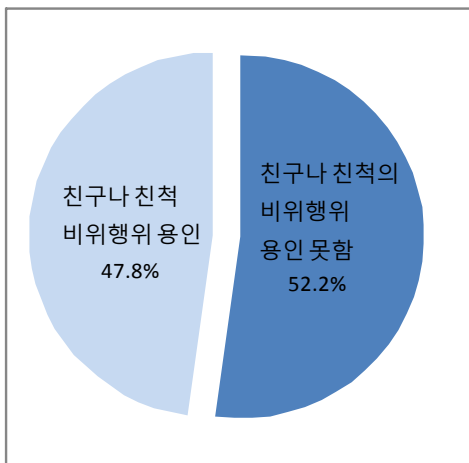


4)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은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케링의 사회 무질서에 관한 연구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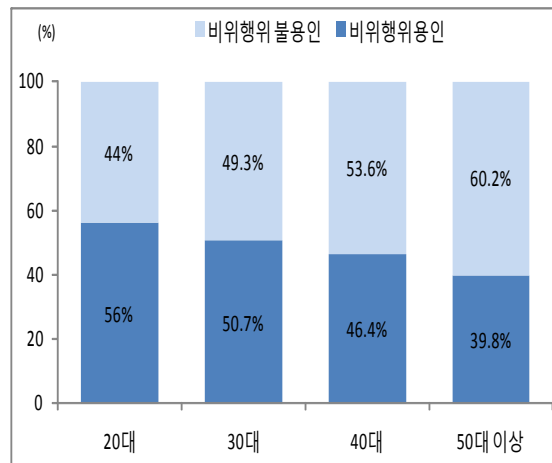
○ 과반수 정도가 친구나 친척의 비위 행위를 용인

- 국민 과반수 정도는 여전히 친한 친구나 친척의 조그마한 비위행위는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친척이나 친한 친구의 조그마한 비위행위 정도는 눈감아 줄 수 있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47.8%로 나타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친구나 친척의 비위행위에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의한 비도덕적인 행위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 (연령별 비교) 연령별로는 2030세대가 친구나 친척의 비위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면, 4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엄격함
 - 20대와 30대는 비위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각각 56.0%와 50.7%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견 44.0%와 49.3%에 비해 많음
 -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은 비위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각각 46.4%와 39.8%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견 53.6%와 60.2%에 비해 적음
 - 연령이 낮을수록 지연, 학연, 혈연에 오히려 좀 더 관대한 모습을 보여 과거 지연학연 문화가 향후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상존함

<친구나 친척 비위행위 용인>



<친구나 친척 비위행위 용인(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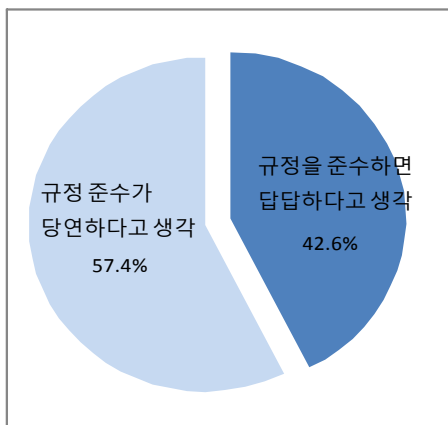


○ 10명 중 4명이상이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면 오히려 답답하다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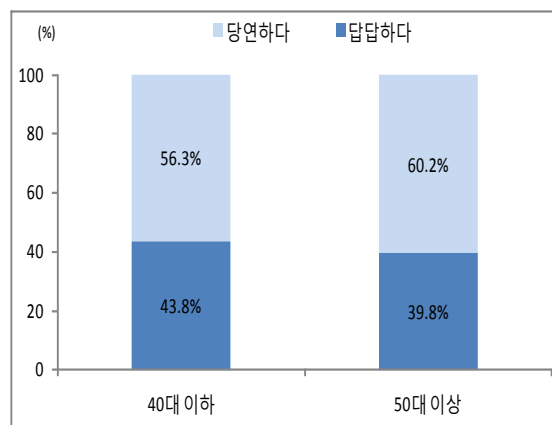
- 정당한 규정 준수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은 답답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을 보면 다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42.6%로 나타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규정 준수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임
 - 규정 준수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정 준수를 융통성이 없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40%이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 국민들의 조급성이 부정부패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움

- (연령별 비교) 연령별로는 40대 이하가 엄격한 규정 준수에 대해 상대적으로 좀더 답답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40대 이하의 경우 엄격한 규정 준수에 대해 답답하다는 의견이 43.8%인 반면, 당연하다는 의견은 56.3%임
 - 한편, 50대 이상의 경우 엄격한 규정 준수에 대해 답답하다는 의견이 39.8%인 반면, 당연하다는 의견은 60.2%임

<엄격한 규정 준수에 대한 인식>



<엄격한 규정 준수(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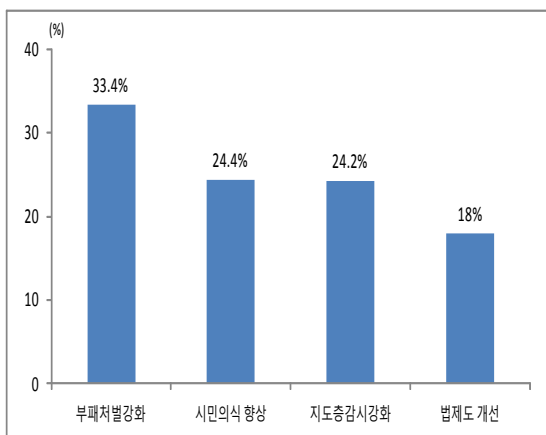


(3) 부정부패 방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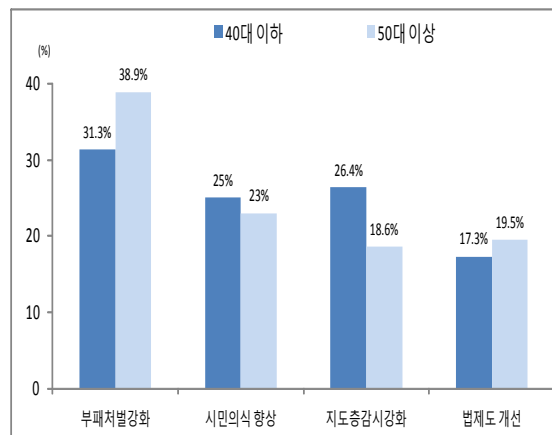
○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 가장 필요

-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안은 부패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귀하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패 처벌 강화’ 응답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외에, ‘시민의식 향상’ 24.4%, ‘사회지도층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24.2%,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18.0% 순임
- 결국, 국민들은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만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경제 성장 토대 마련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연령별 비교) 50대 이상의 경우 부패 처벌 강화가 38.9%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40대 이하는 지도층 감시 강화(26.4%)에 있어서 50대 이상(18.6%)보다 강력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부정부패 방지 방안>



<부정부패 방지 방안(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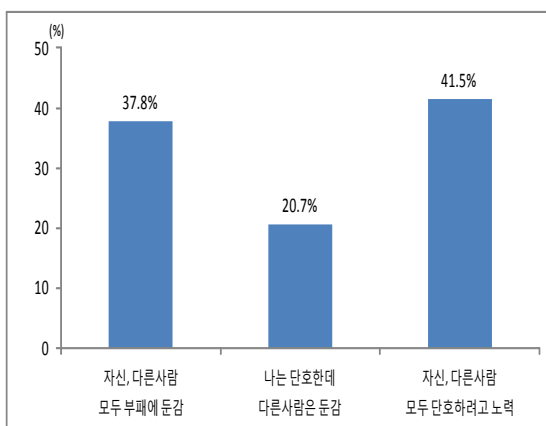
○ 부정부패에 단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아

-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부패에 엄격하려고 노력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10명 중 4명 이상임
 - ‘귀하는 부정행위나 편법 등에 대한 의식 수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부정행위에 단호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라는 응답이 41.5%임
 - 그 외에 ‘나는 부정행위에 단호하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아닌 것 같다’ 20.7%, ‘나나 다른 사람이나 모두 부정행위나 편법에 다소 둔감한 것 같다’ 37.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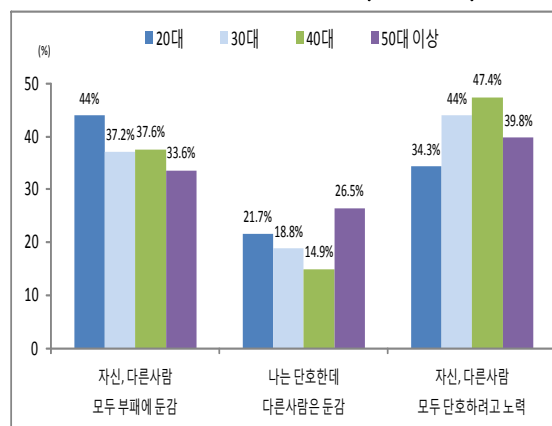
- 자신이 보기에 부정부패에 엄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인식하는 것이 부정부패 의식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이는 현재 부정부패에 대해 엄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이를 통해 향후 자신이 부정부패 하지 말아야겠다는 구속 효과도 줌으로써 부정부패 방지에 긍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임

- 따라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모두 부정부패에 엄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외에, 자기 자신만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 전환시키는지 향후 부정부패 방지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부정부패 방지 노력>



<부정부패 방지 노력(연령별)>



3. 시사점

- 첫째, 국민들의 합의 과정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기준 정립이 필요
 - 핀란드나 독일처럼 청렴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부정부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기존의 막연한 부정부패 기준이 아니라, 계속적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사회문화적 상황이 다른 선진국 수준의 엄격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만의 부정부패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국가 역시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단호한 처벌의 사례를 적극 보여주어야 함
 - 본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인식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함

- 셋째,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들이 스스로 단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 본 조사 결과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부정부패에 엄격한 사람이 많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이를 통해 향후 자신이 부정부패에 단호하려는 구속 효과도 줌으로써 부정부패 방지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함
 - 따라서 이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이 필요함

장후석 연구위원(2072-6234, chahus@hri.co.kr)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3 연간	2014			2015 연간(E)	
			1/4	2/4	연간(E)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3.0	3.9	3.6	3.6	3.6	
	민간소비(%)	2.0	2.5	1.5	2.3	2.8	
	건설투자(%)	6.7	4.3	0.4	1.9	3.0	
	설비투자(%)	-1.5	7.3	7.9	5.7	5.1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	799	151	241	800	680	
	통관 기준	무역수지(억 \$)	441	52	149	433	426
		수출(억 \$)	5,596	1,376	1,457	5,770	6,023
		증감률(%)	(2.1)	(1.7)	(3.2)	(3.1)	(4.4)
		수입(억 \$)	5,156	1,323	1,308	5,336	5,597
증감률(%)	(-0.8)	(2.0)	(3.2)	(3.5)	(4.9)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1.1	1.6	1.7	1.9	
실업률(%)		3.1	4.0	3.7	3.6	3.4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